

학생 인권·교사 교육권 모두 담은 '학생인권법' 주목

특별법 대신 일반법 형태로...목적과 기본 이념 명시 일부 지방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속 재발의 김문수 "인권의식 함양, 성숙한 시민으로의 성장 과정"

학생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충남 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다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9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 학생인권법이 특별법 형태였던 것과 달리 일반법 형



태로 발의돼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나이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책무와 학생이 책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

지 않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 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학생인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센터를 운영하며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중재 등의 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며 "해당 법안은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권의식이 함양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학생인권법'이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강행 흐름에 與 반발 '표결 불감' "추석 밥상 올리기 정치적 술수" 김승원 "토론 불참 굉장히 유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을 풀 나왔다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3차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산

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안도걸, 예결위 결산소위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사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50명의 예결위원 중 유일한 광주 지역구 의원인 안 의원이 7명으로 구성된 결산소위 위원에 선임됨에 따라 광주 뿐만 아니라, 호남 전체의 예결산을 챙겨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결산소위 위원은 관례적으로 예산조정소위(총 15명)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9일 "정책통-예산통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나라 재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재 예결위 활동을 통해 광주의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실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지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

조인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9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전자수거기 부착 등의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스토킹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잠정 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제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해 기존 최장 9개월에서 최장 15개월까



지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잠정 조치의 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를 이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인철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